건설이 복지의 근본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필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는 지난 2006년에 출범한 기관으로 아직 그 역사가 깊지 않다. 그러나 신생기관 답지 않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연구원에서는 설립 이후 매년 20여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전문건설업계가 당면한 현안문제의 해법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경영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연구원이 건설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있는 논리개발, 실태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전까지 취약점으로 평가받았던 논리와 자료 부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및 직할시공제 시행,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등의 도입 과정에서 체계적인 논리를 제시해 이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처럼 연구원은 전문건설협회 및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유기적인 협력, 연구역량 축적, 광범위한 연구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전문건설업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산하고 있으며, 정책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 공생발전위원회에서 내놓은 공생발전방안 중 지난 5년간 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개선방안이 다수 포함된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줄줄이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재화 원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연구원은 설립 초기 단계에서 기초를 충실

〈노재화 원장〉
–1956년 11월 4일 출생
–용산고 졸업
–서울시립대 토목공학 석 · 박사
–화란 IHE Diploma(수공학)
–제14회 기술고시 합격
–건설교통부 원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자원정책과장
–건설교통부 건설기술혁신기획단장
–건설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장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現 (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하천협회 부회장
국토해양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히 닦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날개를 활짝 펼칠 때입니다."

전문건설업계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지난 32년간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붓겠다는 그의 말에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취재진은 지난 6월 11일, 전문건설업계의 현황과 향후 미래에 대해 알아보고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찾았다.

–취임하신 이후 연구원에 많은 변화와 쇄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간의 활동상과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저는 우리 연구원에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데 일조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나 다양한 생각을 공유했으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에는 특히 더 중점을 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현안업무대응팀'을 구성해 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당면한 현안과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종합적 · 체계적인 홍보활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6월부터 매월 뉴스레터를 만들어 연구원 소식 및 최신 건설정보를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이외에도 저가공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적정공사비가 보장되면 원 · 하도급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국토해양부 공생발전위원회에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그 결과 '공사비 산정기준 선진화 실무협의회'가 설치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재 이 협의회는 종합 및 전문 업계, 건설산업연구원, 우리 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의 참여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해야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건설 경기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구원의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원은 물론이고 전문건설업체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그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전문건설업체들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사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직할시공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하고, 그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시공업체의 부도, 공사대금 미확보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정기준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건설경기 침체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상호협력-동반성장 선순환 체계 필요

이처럼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많은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특화된 기술력을 가진 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녹색건설, 물산업, 신재생에너지, 건설IT 등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술요소를 확보하고,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여건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인력난도 우려되므로 시공영역과 업체의 특성에 맞기 노무중심, 장비중심, 재료중심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켜야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이뤄져야겠지요."

그러나 이 또한 건설업체들 사이에서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발전 폭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에서도 대 ·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대 ·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를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체를 단순히 생산요소나 갑 · 을 관계로 여기지 말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로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해외진출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이 바탕된다면 원 · 하도급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또한 신뢰 속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가하도급, 부당감액, 이중계약, 공사비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은 없애고, 공정거래–상호협력–동반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는 이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불공정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조문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처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올바른 사용을 바탕으로 건설업계에 공정한 거래 관행이 자리 잡길 기대해본다.

연구원의 큰 도약 이끌 것

지난 5년이 연구원의 성장 단계였다면 향후 5년은 연구원의 도약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연구원을 이끌게 된 그는 연구원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며, 연구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외부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산업정책 연구와 더불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영전략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설금융 연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현재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2012~2016)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연구원 설립 10년 후의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최근 들어 우리 건설업이 과소평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국가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건설업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 말입니다. 지난 총선 시기, '복지'와 관련된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복지의 근본에 건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취업자의 7%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측면에서 건설업이 지닌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아직 확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께서 복지와 건설이 서로 같은 범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건설이야말로 보편적 복지의 전형입니다. 그러니 항상 애정 어린 시선으로 건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영주 기자 juicce@hanmail.net